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청년의 무엇이 '성평등 프레임에서 젠더갈등과 공정성 프레임으로' 변화한 것인가?

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강사

현재 20대 청년층은 한국에서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향 이동하리라고 예측되는 세대이다. 그런데 그런 지위 하락의 위기 앞에서, 어찌 된 일인지 청년 정치는 남녀 간의 '성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루저', '흙수저' 등 사회적 분배의 문제가 그에 걸맞은 계급 갈등의 양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겉가지로 보이는 청년 남녀 간의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분배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인 사회정의나 공정성의 개념 역시 성별 공정성의 문제로 정치의제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평등'과 관련된 분배의 문제는 계급 또는 계층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계급' 개념은 유럽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불평등이 사회집단 간 대립으로 분출된다는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반면에 '계층' 개념은 청교도 중심 이주민 사회인 미국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개인에게 계층상승 기회를 보장할 때 계급 갈등을 방지하고 분

배 격차를 오히려 개인주의적 성취 의욕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논리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계급' 개념에 기초한 유럽에서는 계급 갈등을 다양하게 제도화한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면, 기능주의 '계층' 개념에 기초한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회 이동성, 즉 계층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반차별주의' 정책들이 강조되었다.

유럽에서는 현재 계급 정치가 약화하고 계급의식이 개인화함으로써(Beck, 1983), 불평등 분배의 문제가 '사회정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정투쟁'의 도덕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호네프, 2011). 즉 '사회권' 보장이 노동자계급(남성) 문화에 대한 제도적 인정의 문제로 인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화된 사회권을 '정치적 대립'이 아닌 '도덕적 인정'을 통해 회복하려고 한다. 사회갈등의 이와 같은 도덕화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는 계급이라는 이익집단(=근대사회의 정치적 주체) 지위가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잃고 개별화한 피고용자

개인들의 ‘대중’ 지위로 인식됨을 말해 준다.¹⁾ 즉 ‘계급’ 개념이 단순한 개인 간 지위 격차를 의미하는 ‘계층’ 개념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계층상승의 개방성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애초부터 계급의식이 미약했던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중정치(populism)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사회갈등이 계급대립이 아니라 이념대립의 양상을 띠었다. 이렇게 이념화의 성향이 강한 가운데, 이제 계층의 상승은 커녕 유지마저 불확실해지자 사회갈등의 이념화가 극우 방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적 이질성’을 보이는 집단(인종, 외국인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혐오의 대중정치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계급이나 이웃 등 사회의 중간 결속체로부터 풀려난 개인들이 새로운 민주적 연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아노미적 원자화에 빠질 때, 도덕적·문화적 ‘타자화’를 경험하는 대중들은 오히려 다른 집단의 ‘타자화’를 통해 자신들의 도덕적·문화적 중심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즉 개인화의 시대에 대중정치로 나타나는 극우적 이념화는 이미 예상되는 정치적 현상이다(백, 2011). 다시 말해서, 대중정치의 극우적 이념화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약화한 상황에서 문화적 중심-주변(타자)을 가름으로써 (도덕적 집단화에 기초해) 불평등을 회피하려는 ‘탈진실’ 방향의 대응방식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 청년층에서 강조되는 ‘공정성’ 개념이 이런 이념화의 방향을 취한다고 본다. 그것은 페미니즘의 ‘성평등’ 의제를 혐오정치와 다르지 않은 ‘젠더 갈등’ 의제로 바꾸고 있다. 과거 ‘공정성’ 개념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이론적 영역은

‘사회정의’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현재 청년 남성들 중심으로 의제화하는 ‘공정성’ 요구는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루저’와 ‘흙수저’의 위험에 빠진 청년 남성의 ‘인정투쟁’을 표현한다고 본다. 특히 이것은 ‘억울함’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산업화 동안 한국에서 사회의 중간 결속체는 가부장적 ‘연고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붕괴하면서, 청년 남성들은 그것을 개인주의적 규범 변화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부장적 남성성 인정의 상실’로도 경험한다. 즉 청년 남성들이 유독 규범 갈등의 아노미를 겪는 것이다. 또 한국 역시 계급 갈등이 미약하고 이념 갈등이 극대화한 정치문화를 보이므로, 그 속에서 청년 남성의 집단적 계층 하락 위험은 정치적 대응보다 도덕적 대응을 부르기 쉽다. 여기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도덕적 분노의 대상으로 집약되고 있다.

I. 한국의 청년층: ‘성평등’ 프레임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1. 온라인 ‘여성혐오’를 거쳐 온 · 오프라인 ‘젠더 갈등’ 정치로

한국 청년층에서 ‘성평등’ 의제가 ‘젠더 갈등’ 의제로 변화한 데에는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이 매개적 작용을 했다. 군가산점제 폐지로부터 시작한 일방적 온라인 여성혐오가 쌍방향 온라인 젠더 갈등으로, 그리고 이후 온·오프라인 ‘젠더 갈등’ 정치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는 한국의 급속한 정보화로

1) ‘계급’과 ‘대중’을 이렇게 대립시키는 관점은 아렌트(2006) 참조.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남성 중심의 온라인에서 처음에는 일방적 '여성혐오' 담론이 지속하다가, 2015년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여성들이 '미러링'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쌍방향적 '젠더 갈등'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2016~2017년 '촛불혁명' 동안 오프라인에서는 사회통합을 표방한 광장정치가 지배적이었어도, 온라인에서는 젠더 갈등이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표출되던 젠더 갈등은, 촛불혁명으로 인한 정권 교체 이후 오프라인으로 상륙하면서 차츰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젠더 갈등이 사회문제화한 데에는 청년 세대의 온라인 담론 갈등에 무감했던 정당들의 태도가 중심적인 작용을 했다.

20대 남성들 특유의 문화가 언론의 눈에 띈 것은 2018년부터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에 대해 젊은 남성들 위주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20대 남성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한편 같은 해에 청년 여성들의 '해화역 시위'가 계속되면서 청년 여성 특유의 문화 역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요구가 일부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년 남성들이 그것을 '친페미니즘' 정책이라고 칭하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기성세대 남성들이 청년 여성들의 새로운 문화를 탓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언론이 선정적인 '청년층 성 대결'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젠더 갈등 의제는 기정사실이 되어 스스로 재생산하는 동력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18년까지만 해도 20대 여성들만이 피해자 관점에서 '젠더 갈등'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지했다

면, 이후에는 20대 남성들이 '억울함'을 내세우며 젠더 갈등에 '공정성' 개념을 적용하거나 '반페미니즘'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 '공정성'의 정치

'20대 남자 현상'(천관율·정한울, 2019)이나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마경희, 2019; 2020)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2019년에는 아직 20대 남성들이 '생활보수'라고 생각되었다.²⁾ 그러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20대 이하 젊은층의 정치성향이 성별로 뚜렷이 나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기인했음을 상기하면, '젠더 갈등'이 뜨거운 상황에서 젊은층 남녀의 격차가 나타난 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전 시장 소속 당에 더 호의적 투표를 했던 반면, 미투 운동 이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주장했던 젊은 남성들은 전 시장을 두둔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정치성향이 이렇게 나뉘는 데에는 청년 남성들의 '공정성' 개념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이후 '공정성'이 청년 세대의 새로운 표어인 양 언급되었다. 과거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결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듯이, 20대 남성들은 '공정성' 개념을 젠더 갈등에만 한정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듯이, 그들의 '공정성' 개념은 '부모 찬스'에 대한 거부감과 '능력주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필자가 참여한 2019년의 한 비공개 질적 조사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청년 남성들은 공정성 개념을

2) '생활보수' 개념은 필자가 참여한 2019년의 한 비공개 질적 조사연구에서 20대 남성이 스스로를 지칭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이 비공개 연구에 대해서는 홍찬숙(2021 출간예정) 참조.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이해했다. 청년 남성 중 일부는 공정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정의는 ‘강력한 처벌’을 의미했다. 이를 보면, 20대 남성들은 페단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세우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제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공정성 시비 역시,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올림픽 출전을 준비했다가 출전하지 못한 남한 선수들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3. ‘공정성’ 주장의 종착점은 왜 ‘젠더 갈등’인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에게 ‘공정성’은 롤즈(2003) 정의론의 ‘절차’보다는 산업화 시대의 적폐였던 ‘연고주의’와 대비되는 ‘능력주의’로 이해된다. 이것은 필자의 2019년 조사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공정성’을 주장하거나(주로 남성) 비판하는(주로 여성) 경우 모두 ‘공정성=능력주의 원칙’의 개념을 보였다. 한편으로 이것은 민주화 세대의 공정성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연고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기서 민주화 세대의 공정성 개념과 완전히 다른 점은, 마지막 ‘개천의 용’ 세대인 그들과 달리 청년들은 ‘개천의 용’인 부모 밑에서 ‘루저’가 되지 않도록 학력 성취를 강요받으며 미성년 시기를 ‘노오력의 시간’으로만 기억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즉 그들의 ‘능력’ 개념에는 ‘잉여’(최태섭, 2013; 김상민 외, 2013)나 ‘N포 세대’로 전략할 위협과의 전쟁이라는 심리적 차원이 내재한다.

성취할 재화의 희귀성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은 베버가 말한 ‘사회적 폐쇄’ 전략을 유발하기 쉽다. 한국에서 최근 20대 청년들이 집합적 목소리를 낸 대표적 사건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나 ‘의대생 파업’과 같은 사건들을 상기할 때, 20대의 ‘공정성’ 개념에는 이런 ‘사회적 폐쇄’의 지향성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고등교육은 ‘사회적 책임’을 자임하는 유교 지식의 이미지와 결합해 있었다(홍찬숙, 2018). 그러나 1990년대에 ‘X세대’가 기성문화에 맞서 ‘자기주장’을 한 이래, 그리고 대학 진학이 보편화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내 위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개인주의 규범은 더 이상 서구 문화의 병폐가 아니고, 능력 성취는 더 이상 한가한 ‘자아실현’이 아니게 되었다.

청년층이 촛불혁명을 통한 ‘공정성’ 실현에 낙관했을 동안, 청년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개인주의 규범과 어울리는 서구적 사회정의를 꿈꾸었을 것이다.³⁾ 그러나 ‘부모 찬스’의 사용이 근절되기 어려울 거둬 확인하면서, 청년들은 어쩌면 ‘사회정의’보다 ‘사회적 폐쇄’가 더 현실성 있는 목표 또는 전략이라고 인지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청년 남성의 대표적 ‘폐쇄’ 전략인 반페미니즘은 점차 정치적 명분을 얻는 중이다. 반페미니즘은 청년 남성들의 ‘사회적 폐쇄’ 성향이 가장 일찍부터 드러난 현상으로서, 청년 남성들의 정치성향 차이 또는 변화와 무관하다. 게다가 청년 남성이 처한 다양한 불평등 상황 속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념 갈등 지형 속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계급 갈등이나 사회지도층인 기성세대 남

3) 이것은 필자가 주도한 2018년의 조사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홍찬숙·한정숙·오현미·김보명, 2019). ‘촛불혁명’ 관련 인터뷰에서, 청년 남성들은 기성세대 남성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촛불혁명’을 ‘자기 목소리’의 발견 또는 표출 공간으로 생각했다.

성과의 대결보다, 젠더 갈등이 청년 남성에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갈등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다.

II. 한국 청년층의 '공정성' 정치

‘공정성’과 ‘사회정의’는 흡스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즉 공동체가 붕괴하여 개인들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결의 원칙으로서 생겨나는 개념이다. 특히 ‘공정성’은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쌍방의 합의를 통한 당사자 간의 공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인 판정관을 통해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다. 쌍방 간의 합의에는 협상 권력의 불평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정의’ 관점에서 공정성은 제3자 관점, 즉 불편부당함의 원칙과 연결된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정의론」의 부제로 사용한 롤즈(2003)는 이 ‘제3자 관점’을 제도적 절차로서 구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Barry, 1989).

롤즈는 현대 복지국가 이론의 기반인 공리주의적 정의 개념을 비판하며, 칸트의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급진자유주의적 정의 개념을 주창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칸트의 ‘정언명령’으로서 보편적 실천이성이 아니라,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공정성’ 개념을 강조했다. 즉 ‘공정한 절차’란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부당의 ‘보편윤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윤리론과도 일치한다. 즉 도덕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공정성은 특정 집단의 도덕을 대변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특권을 ‘당연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배리는 이 두 이론적 요소, 즉 상호 이익과 불편부당

을 각각 ‘정의의 상황’과 ‘불편부당의 인위적 미덕’으로 표현했다(Barry, 1989: 148-149).

‘정의의 상황’은 사회 불평등의 차원, ‘불편부당의 미덕’은 공평성 윤리라는 도덕판단 차원의 문제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국 20대 남성의 ‘공정성’ 정치에 대해 살펴본다.

1. 불평등과 ‘공정성’

현재 한국의 20대 남성들은 남성에게 제한된 국방의무, 남경과 여경의 선발기준 차이, 취업집단에 대한 할당제, ‘여성’ 범주에 기초한 정부부서(여성가족부)의 존재 등이 모두 일정 사회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으로서, 기회균등의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기회균등의 공정성’ 개념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의론에 ‘공정성’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 철학자인 롤즈는 바로 정의로운 기회균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성’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범 경제학자들(Ferreira and Peragine, 2015)은 롤즈의 정의론을 ‘복지론’ 패러다임과 대비되는 ‘기회평등론’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한다. ‘복지론 패러다임’이 공리주의적 접근이고 또 개인의 성취를 단순히 덧셈하는 방식이라면, ‘기회 평등’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서 핵심은 ‘개인 책임’의 문제이다. 즉 개인의 선택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개인 책임이나 아니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평등론’ 패러다임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선택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우연성 또는 운에 관한 것이다. 운은 본인의 선택에서 작용

하는 운과 개인의 선택 자체를 제약하는 우연성의 문제로 나뉘는데, 선택을 제약하는 우연성 중 특히 인생 출발점에서의 격차—사회적 배경의 격차와 타고난 개인적 격차—가 중요하다. 롤즈는 이 우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공정한’ 절차라고 불렀고, 그것의 내용을 ‘차등의 원칙’으로 정리했다.⁴⁾ 그리고 그 공정한 기회균등의 절차에 의해 사회구조적으로 조정된 결과를 ‘결과적 평등’이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롤즈가 말하는 ‘결과적 평등’은 결과의 완전한 ‘동등성’이 아니라, ‘공정성’인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성별 공정성’의 이슈들, 즉 남성에게 제한된 국방의무, 남녀 간의 신체적 능력 차이, 양성 간의 사회적 불평등 등은 1) 남녀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2) 개인이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가의 태생적 우연성이 서로 맞물려서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방책부터 주장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얽힌 사회불평등의 양상과 태생적 차이의 문제에 대해 다각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중 ‘할당제’는 미국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 제시된 흑인 차별 시정 ‘적극적 조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차별 금지’ 관점의 정책들은 ‘복지론 패러다임’이 우세한 유럽에서도 1990년대 이후 논의 및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논의되어 일부 도입되었다. ‘계급 평등’ 관점이 지배적인 조합주의적, 보수적 전통의 서구 복지국가에서조차 현재는 할당제나 남녀동수제 등 직접적 차

별 시정 조치들이 제도화되어 시행 중이다. 세계 성 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등의 성 불평등 지수들을 볼 때, 한국의 성별 불평등은 이들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사회구조의 성별 불평등에 대해 여성들이 할당제 등 정책적 대응을 정치적으로 요구했듯이, 청년 남성들 역시 자신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해결할 정책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먼저 청년 남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이 진정 성별 불평등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인 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종 국제적 지수들을 통해 한국의 성별 불평등 현황이 명확히 알려진 가운데, 청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이 성별 불평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 불편부당의 정치 윤리와 ‘억울함’의 집단 도덕 감정

롤즈가 게임이론에서와 다르지 않은 상호 이익추구의 상황에서 시작하여 불편부당한 공정성의 원리를 추출했다면, 공리주의자인 고티에(Gauthier, 1986)는 불편부당한 제3자나 사회구조와 무관하게 당사자들 간의 흥정 상황에서 공정한 ‘도덕 원칙’을 추출했다. 그는 흥정 상황에서는 각각의 당사자가 ‘최대한의 상대적 양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즉 각자가 합의를 위해 자신의 관점에서 최대한 양보해야 하는 몫을 각자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도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차별화하여 ‘최소최대(minimax) 원리’라고 불렀고 또 사회정

4) ‘차등의 원칙’은 게임이론의 용어로 ‘최대최소(maximin) 원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연성의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의 기본구조에 기초해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공정한 자유의 원칙’이나 ‘지위와 직책의 공정한 개방성 원칙’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공정성’ 개념의 핵심이다.

의의 원칙이 아니라 도덕성의 원칙으로서 도출했다.

이것은 불평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서로 양보한 몫의 절대적 크기와는 무관하게 단지 그것을 최소화했다는 동일 원칙을 따랐으므로 공정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결국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도덕원리와 다르지 않다. 배리는 이것을 '홉스의' 방법으로 '로크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Barry, 1989, p. 297). 만일 '공정성'을 고티에처럼 이렇게 이해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은 분배를 협상하는데 있어서 자신보다 협상 권력이 큰 상대를 피하고 되도록 협상 권력이 적은 상대하고만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20대 남성들의 '공정성' 개념이 유독 젠더갈등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 남성들은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수저 갈등(=계급 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 등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흡수저 문제(최서운 외, 2016; 조귀동, 2020), 세대 갈등(김정훈·심나리·김항기, 2019), 헬조선 문제(강세진·송민정·최정은, 2017; 김창인·전병찬·안태연, 2019)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그런데 그것이 온·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집단적 발언으로 표출되는 쟁점은 거의 유일하게 '젠더 갈등'뿐이다. 이것은 20대 남성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이 남성으로서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 분배 협상의 상대로서 여성 집단의 협상 권력만이 자신들의 협상 권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나마 제도적으로 미력한 할당제와 여가부에 대한 폐지 요구는 20대 남성들의 공정성 도덕이 고티에의 '최소최대(minimax) 원리'에도 미치지 못함을 드러낸다. 협상 대상인 여성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대 양보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별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20대 남성들은 신고전주의적 '공정성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드러내며 '불편부당함'이라는 민주적 정치 윤리를 외면한다. '불편부당함'이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 윤리가 된 이유는 민주사회는 도덕 다원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즉 도덕의식은 '사적 선호'의 문제이므로, '공적' 정치 영역에서는 '불편부당'의 보편윤리가 '인위적'으로 발명되었다. 그런데 고티에의 공정성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대 남성의 공정성 주장은 고티에처럼 '이익'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필자의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20대 남성의 집단적 도덕 감정은 '억울함'이다. 그런데 바로 이 억울함의 감정이 그들의 공정성 개념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즉 20대 남성들은 성별 공정성을 단순한 '이익 분배'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울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제로서도 요구한다. '인정'으로서의 '사회정의'라는 정의론 프레임은 분배 정의를 사회정의의 핵심으로 설명한 롤즈의 '절차적 정의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에서 출발했다. 하버마스의 '담화적 정의론'은 공정한 절차의 제도화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공론장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모든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공적 발언'의 기회가 보장됨으로써만 사회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분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 정치'의 문제이므로, 불평등하고 이질적인 구성원의 목소리 역시 동등한 '목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공론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주로 20대 여성의 페미니즘 목소리,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엘리트 청년 집단의 '사회적 폐쇄'의 목소리로서 표

출된다.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목소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난과 농담의 형태로’ 머물러 있었다(윤보라, 2016).⁵⁾ 그들의 반페미니즘 정서가 정치적 ‘불편부당’ 윤리에 어긋나므로 공공연히 주장하기에는 정당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요구인 페미니즘을 남성 차별주의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명백히 편파적이다. 그래서 20대 남성은 자신들의 정서를 당당하게 공론장에서 주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회구조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1990년대 탈근대주의의 유행 속에서 이미 쇠퇴했기 때문에, 586세대가 그에 대한 언어를 독점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586세대와 문화적 단절을 느끼는 청년 남성들의 감수성을 표현할 언어적 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20대 여성은 서구 페미니즘의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현실 인식을 표현하나, 20대 남성의 감수성에 맞는 개념들은 기성품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론장에서 자신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현실 인식이 동등한 목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따라서 20대 남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찾아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 주체로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현재와 같이 특정 정당들의 표발으로 대상화되어 단순 동원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성찰되어야 할 것은, 20대 남성들의 ‘공정성’ 요구가 그 개념에 걸맞

게 편파적 욕구의 발산이나 이익추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공정성’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합의 없는 상황에서 합의도출’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즉 상호 이익의 추구가 ‘공정성’ 논의의 출발점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조’의 정의를 주장할 때, ‘공정성’ 개념은 윤리적 측면에서 ‘불편부당’의 정치 윤리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⁶⁾ 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편파적·폐쇄적 전략은 혐오의 정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극우적 대중정치(populism)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III. 나가며

소위 ‘성 갈등’ 프레임의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엘리트 집단의 ‘사회적 폐쇄’ 전략이나 반페미니즘 집단화의 감정을 당연시하는 20대 남성의 불공정한 ‘공정성’ 주장이 (여야를 오가며) 정치권의 득표 전략으로 계속 부상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대 남성을 정당의 지지자로 유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만은 아니다. 또 선정적 이슈 마케팅에 전념하는 언론의 상업적 행태 때문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이익 계산의 바탕에는 어떤 문화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 남성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20대 남성의 ‘공정성’ 개념에 상당 부분 공감하도록 하는 ‘남성성’ 문화, 더 정확히는 남성성 문화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5) 이는 필자의 조사연구들에서도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되었다.

6) 페미니즘 사상에서는 대체로 자유주의의 ‘불편부당성’ 원칙을 ‘중립성’ 원칙과 동일시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부당성 원칙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불편부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근대사회를 남성 중심적 사회로 제도화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즉 페미니즘에서는 ‘불편부당성’ 개념의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젠더 민감성을 주장해 왔다.

필자가 참여한 조사연구의 결과들에 의하면, 20대 남성들은 동년배 여성들의 자생적 페미니즘 문화에 실제로 '억울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 억울함은 단순히 남녀 간의 직접적 비교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20대 남성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점은, ① 기성세대 남성에게는 당연했던 가부장적 지위가 자신들에게는 박탈되었다는 것('루저'-남성성), ② 그런데 자신들 세대의 여성들이 반가부장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성 불평등 현실변화의 부담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세대 간 불공정성), ③ 게다가 가부장제의 일방적 수혜자인 기성세대 남성, 특히 586 남성이 청년 여성의 페미니즘 요구에 동조한다는 것(586세대의 위선)이다.

다시 말해서 20대의 '젠더 갈등'은 단순히 성별 공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성들 내부의 세대 간 불공정/불평등과 한 코씩 촘촘하게 얹혀 있다. 현재는 특히 '정의'와 '공정성'을 내세우며 가부장제의 혜택과 친페미니즘 이미지를 모두 누리는 586 남성에게 대한 도덕적 분노가 매우 커진 상태이다. 이것은 세대별 '분배' 불평등의 문제(이철승, 2019)이면서 동시에 남성성 '인정'의 문제이다.

즉 변화할 수밖에 없는 남성성을 '정상'으로 인정받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과거 586세대는 '세대론' 프레임을 통해서, 청년층의 남성성을 '짱돌도 못 드는', '찌질함'(우석훈·박권일, 2007)이나 '개인주의'(=규범 변화) 없는 (단순 위험회피로서의) '개인화'(장경섭, 2018)로 표현했다. 즉 남성성 규범의 변동(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⁷⁾ 586 남성들이 현재 20대 남성에게 표현하는 공감 역시 '동정심' 수준이다. 말하자면 IMF 직후 문화변

동을 꿈꾸던 X세대가 '아버지에 대한 공감'으로 돌아섰듯이, 이제는 마치 그에 대한 답례인 듯 586 남성이 'N포 세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탓일 뿐, 규범변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 세대별 분배의 문제 역시 단순히 세대 간만의 일차원적 문제가 아니라 계급 및 계층화의 복잡한 차원들과 또 얹혀 있다(박종훈, 2013).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측면의 다차원적 권력 격차가 세대 간뿐만 아니라, 세대 내 남성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20대 남성이 가부장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 개개인이 '루저'라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변동 때문이고 또 복잡한 방식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이것 역시 '개인 책임'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이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성세대 남성보다 훨씬 권력 자원을 갖지 못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불공정한 현실'이 억울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남성 기성세대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586)를 모두 아우른다. '촛불혁명' 당시처럼 산업화 세대의 불공정성이 더 크게 인지되면 세대 간 '정치적' 분노가 더 커질 것이다. 반면에 민주화를 주장한 586세대의 불공정성이 발견된다면 '위선'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 속에서 두 당 지지를 오가며 단순한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남성성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사회변동에서 젊은 남성들이 '루저'가 되지 않도록 규범적 변화를

7) 이에 비해 필자의 조사연구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 남성의 집단주의 문화에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며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로 칭한 경우가 많았다.

긍정하고 사회경제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시민 주체로서 자신들의 언어로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청년 남성들의 ‘공정성’ 요구가 ‘성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복잡한 불평등

현실을 겨누도록, 규범적·사회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럴 경우, 청년 여성의 ‘성평등’ 정치는 청년 남성의 ‘사회정의의 공정성’ 정치와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세진·송민정·최정은, 『청춘의 가격』, 사계절, 2017.
- 김상민·김수환·김홍중·백옥인, 『속물과 잉여』, 지식공작소, 2013.
- 김정훈·심나리·김항기, 『386 세대유감』, 웅진지식하우스, 2019.
- 김창인·전병찬·안태연, 『청년 현재사』, 시대의창, 2019.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소미,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마경희·김원정·문희영·고현승·김문길·여유진·박종서·김선·추지현·김선기,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 박종훈,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1세기북스, 2013.
- 악셀 호네프, 이현재·문성훈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울리히 벡, 홍찬숙 역,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길, 2011.
-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 윤보라,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 윤보라·임옥희·정희진·시우·루인·나라, 『여성 혐오가 어땠다구?』, 현실문화, 2016, pp. 9~46.
-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2019.
- 장경섭,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생각의힘, 2020.
- 존 롤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 천관율·정한울, 『20대 남자』, 시사N북, 2019.
- 최서윤·송지혁·홍덕구·안혜연·구자준·최은혜·허민·김희원·최병구·한영인, 『흙흙청춘』, 세창미디어, 2016.
- 최태섭, 『잉여사회』, 웅진지식하우스, 2013.
- 한나 아렌트, 박미애·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 홍찬숙, 「2016-17년의 광화문 광장: 유교 공론장에서 시민 공론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2호, 2018, pp. 147~179.
- 홍찬숙·한정숙·오현미·김보명, 『개인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한국사회 변동의 방향: 촛불혁명과 미투운동(#metoo)을 중심으로』, SBS 문화재단 제출 연구보고서, 2019.
- 홍찬숙,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 세창미디어, 2021 출간예정.

- Arendt, 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51.
- Barry, B., *Theories of Just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Beck, U., “Jenseits von Stand und Klasse? In R. Kreckel(Ed.),” *Soziale Ungleichheiten*, 1983, pp. 35~74.
- Beck, U., *Macht und Gegenmacht im globalen Zeitalter*,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2.
- Göttingen: Schwartz.
- Ferreira, F. H. G. & Peragine, V., *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Evidence*, IZA Disussion Paper Series.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2015.
- Honneth, A.,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Gauthier, D., *Morals by Agre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